

투데이 칼럼

서초동 200만 촛불집회의 열기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역시 보수언론들의 충격은 컸다. 이들은 기껏해야 10만 명이나 모이면 많이 모일 거라 예상한 듯하다. 조선일보야 노골적으로 “조국 놓고 돌로 갈라진 서초동”, “진문집회” 등으로 시민 권기를 폄하하는 ‘상투적인 정치 수사(修辭)’로 말하지만, 자칭 진보라는 한겨레신문도 “서울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을 주장하는 찬반 집회가 열렸다.”라고 1:1 식의 기사를 썼다. 그러나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은 50만에서 200만이 모였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과연 150만에서 200만 시민이 참여한 집회가 ‘조국’이 중심 테제였을까? 동기는 됐는지언정 중심 된 주어일 수 없다. 시민의 권기에서 주제와 주어는 “검찰개혁”을 통한 상식과 사회 이성에 바탕을 둔 정의의 사회 구축이고 무엇보다도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시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권기의 중심이다.

그리고 언론 개혁이다. 한국 사회 시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언론 표방 매체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다. 150만인지 200만인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그 숫자를 축소해 폄하하고자 해도,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시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9년 전 서초동 그 자리에는 문재인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19년 전 부산 명지시장 주차장에서 홀로 연설하던 노무현이 그 후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은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뜻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를 이어 전해지기 마련이다. 언뜻 고요하지만 무거운 외침들이 모여 또 세상을 바꾼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일까? 저 분노하는 민심을 무엇이라고 읽어야 할까? 단순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조국 수호’라고 보아야 할까? 민심을 그렇게 읽는 것은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잡아 보는 태도다. 조국 사건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설명하는 사건일 뿐, 그 수사를 막는 게,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라고 할 수는 없다.

민심에 나타나는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

한 것은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엔 검찰권이 대한민국 최상의 권력, 대통령을 능가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무제한의 강제수사 등등은 조국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적 정의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철저히 제도화하여, 검찰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력집중을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검찰의 특수수사를 폐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언제든지 인사권을 가진 권력이 검찰을 길들여 검찰권을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는 권력자가 자의적

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에 일대 혁신을 가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 심사회 제도와 같이 검찰의 기소 불기소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올라간 패스트 트랙 법안(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이런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엔 태도 없는 안이다. 위의 개혁방향으로 보면 그 내용은 너무나 부족해 어디 가서 말하기조차 쑥스럽다. 사실 그들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인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면 이제까지 해온 개혁안의 통과에 관심을 두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사 착수하고, 국회입법을 해야 하는 개혁에 대해서 현재의 안 이상을 준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 총선 이후에 순식간에 처리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조국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사설
쓰레기 문제로 언제까지 골치 아파야 하나

전북도에게 말 할 것이 있다. 쓰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골치를 썩어야 하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말로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실행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여기 지난 봄에 입실군에서 발생했던 불법 폐기물 건을 다시 상기시켜야겠다. 그 때문에 뜨거운 분노의 목소리가 비등했던 것을 전북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불법 폐기물이 항포에서 발생한 것이라든가 안될 말인데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라는 보도를 듣고 다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었다. 특히나 입실 지역 주민들이 더욱 그랬을 터이다. 그때 입실군이 부랴부랴 나서서 한 번 폭발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다.

그때 불법 폐기물 3만8천 톤을 두고 전북도에 했던 말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말로만 전북의 뉘를 찾고 말로만 자존을 말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 본보는 전북도가 바보스러워도 이 정도로 바보스러운 지는 몰랐다고 지적했었다. 말끝마다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되뇌었지만 그게 헛소리라는 게 그때 드러났던 것이다. 타 지역에서 모여든 각종 폐기물 때

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동안 몰랐더니 매우 한심스러웠다. 그 비슷한 행태를 이번에는 군산시가 보여주고 있다. 역사나 기가 막히는 일이다. 전국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이 군산으로 유입돼 8개월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전북도와 군산시에 촉구할 말은 분명하다. 말로만 제뭇을 핑계지 말고 말로만 자존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다. 외지의 쓰레기나 반입하는 주제에 무슨 제뭇 찾기고 무슨 자존심 강조란 말인가. 지역 발전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주었다고 주문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것이라니 배신감이 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곤란하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을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모든 시군의 단체장들과 함께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번엔 전북도와 군산시는 삼기일절해야 한다. 구속된 무허가 업자에게만 핑계를 대지 말고 불법 쓰레기 문제를 숙히 결판내 주기 바란다.

새만금 물류 비전을 키워야

전북도는 새만금의 물류 비전을 키워야 한다. 비전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도민 전체의 뜻이다. 저번엔 새만금 인입 철도 사업 건이 용역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원대한 꿈에 한 발 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철도가 연결되고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땅과 하늘에서 물류허브의 꿈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해수부의 5만톤급 규모 확대안과 관련해 주문했던 게 다시 생각난다.

전북도가 새만금 비전을 키우는 것은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다. 그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 규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신항만 부두 시설은 2만톤에서 3만톤 정도의 규모이기에 발 빠른데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하지 않았다가는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의 항구들에 비해 낙후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장차 동북아의 허브로 키워겠다는 욕망을 생각할 때 전북도가 재정 사업의 성격을 민자보다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잘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 힘내야겠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그 구축의 정도는 얼마어마한 것이 아니다. 도민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들려준 수준의 인프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래 전부터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건설 의지를 보여줬는데 아직은 청사진 수준에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도민은 전북도의 SOC 대응책 발원과 관련해 가는 기대가 크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말한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새만금 비전은 돈이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전북도는 그 돈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없다. 정부만 바라보는 실정인데 매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신너머 산이다. 전북도는 신항이며 공항이며 철도 건설 등 물류 허브 기초를 다지기 위해 힘내야 한다. 전북도는 더 뛰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만족을 말할 수 없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국제공항과 신항만과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돼야 하고 해마다 계속해서 증액돼야만 한다.

독자제언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

최근 계부가 5세 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특히 계부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모친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가정도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폭행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무지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미흡하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시작되더라도 훈육자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강도 높은 폭력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폭력에 둔감해진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론화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아동학대 건수는 5578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만2367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우리의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도, 집안일도, 훈육도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최해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건국 70주년, 대대적 열병식



1일(현지시간)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병식 등 축하 행사가 열려 중국 의정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